

아프가니스탄 피랍의 비극을 기억하라

자이툰 파병 재연장은 미친 짓이다

» 관련 기사 3면

뉴코아 · 이랜드 추석 집중 투쟁에 연대하라

» 관련 기사 12면

다시 듣는 맞시름 2007 ②



린지 저먼
- 사랑, 결혼, 그리고 가족
I ~ IV면

주류 정치권의 위기와
문국현 현상,
민주노동당의 도전

4, 6면

한미 정상회담
- 한반도 위기와 평화협정

4면

가야차비정규직 파업의
쓰디쓴 교훈

10~11면



국회 비준안 상정과
한미 FTA 반대 투쟁

7면

국가보안법의 이중잣대

12면

서평

- '세대'만 보고 '계급'을 놓친
《88만 원 세대》

5면

〈맞불〉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맞불〉 온라인 기사

학생 운동 단일 조직 건설의 쟁점
학생 운동 단일 조직이 진정으로 광범한
학생들의 단결을 구현하는 조직으로 건
설하려면 어떤 관점과 접근이 필요한지
를 설명한다.

부시의 이란 공격 준비
부시와 전쟁광들이 어떤 논리와 선전 공
세를 통해 이란 공격을 위한 분위기 조
성에 나서고 있는지 폭로한다.

서브프라임 위기와 자본주의
금융 체제가 어떻게 자본주의에 필수적
이면서도 동시에 불안정을 낳는지, 서브
프라임 위기 뒤에는 자본주의의 어떠한
근원적 모순이 깔려 있는지 설명한다.

.....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추석 연휴 관계로 다음 호는
10월 6일에 발간됩니다.



인용해도 될까요?

“여기 있는 분들 중 비정규직스러워 보이는 분들이 하나도 없다. 옷도 잘 입으시고 절세미인들이어서 비정규직이 아닌 줄 알았다.”

— 한나라당의 ‘여성 비정규직 토론회’에서 〈조선일보〉 문갑식

이명박: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에 상응하게 올려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 … 최근 이랜드와 같은 역작용도 없어야 한다.”

〈조선일보〉논설위원 문갑식: “노동 문제는 끈구름 잡는 애기로 다 될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과도한 희망을 줘서는 안 된다.”

— 이명박의 허풍과 〈조선일보〉의 쓴소리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대운하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 이명박의 꾀변

“새만금에 1백 개의 골프장과 콘도, 마리나 시설 등이 들어서는 레저 파라다이스를 조성해야 한다”

— 이명박의 경부온화와 다들 바 없는 유시민의 공약

“[실형 선고로] 우리 나라 경제를 위협에 빠뜨리는 도박을 하기 꺼려졌다. 피고인이 말이 좀 어눌한 것은 알지만, 그동안 쌓인 경험으로 강연을 잘할 것으로 본다.”

— 정몽구에게 강연회로 ‘사회봉사’ 하라는 서울고법 형사10부 수석부장판사 이재홍

“KBS 〈폭소클럽2〉의 ‘택배 왔습니다’ 코너에서 철도공사가 전 KTX승무원을 ‘KTX처럼 빠르게 잘라버렸다’는 등 사실과 다른 악의적 왜곡을 했다.”

— ‘도둑이 제 발 저리’듯 코미디 프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철도공사



군함발로 평택을 짓밟은 정부야말로 “불법·폭력”을 저질렀다

‘벌금 폭탄’으로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부

지난해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벌금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은 올해 8월 말까지 시위 참가자 1백 65명에게 1인당 1백~3백만 원씩 무려 벌금 4억 원을 부과했다.

국방부는 얼마 전 대추분교를 파괴하는 데 든 돈 1억 5천3백만 원과 연체 가산금 2천3백만 원을 붙여 김지태 대추리 이장의 재산을 압류했다.

정부는 “불법·폭력에 대한 형사상 무관용 원칙”을 말하고

있다.

정몽구가 저지른 천문학적 액수의 비리는 “그동안 공을 감안해서” 용서받을 만한 일이지만,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과 전쟁 기지 건설에 반대한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자라는 것이다.

이런 몰상식한 공격은 단지 평택 시위 참가자에게만 그친 게 아니다. 장애인 차별 반대 시위에 참가한 장애인 활동가 65명에게도 1억 2천여만 원의 벌금

형이 선고됐고, 한미FTA 반대 집회 참가자에게도 벌금형이 이어질 듯하다.

이것은 명백히 “집회·시위의 자유를 사실상 제한”하려는 시도다.

노무현 정부는 이런 야비한 공격으로 신자유주의와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 더 큰 목소리로 항의해서 이런 시도를 좌절시켜야 한다.

승영

비리·폭력 재벌의 하수인 법원의 ‘유전무죄’ 판결

법원이 역겨운 ‘유전무죄’ 판결을 연달아 내리고 있다. 1천억 원을 횡령한 정몽구에 이어, 조폭을 동원해 납치·감금·홍기 위협·폭행을 저지르고 수사 무마를 위해 수억 원을 뿌려 경찰 수뇌부를 매수한 김승연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다.

정말이지, “이래서 석궁이 필요하구나”라는 반응이 나올 법하다.

‘비리 재벌’ 정몽구는 단 두 달 만에 보증금 10억 원을 내고 풀

려났다. 김승연은 1백24일의 구속기간 중 무려 3분의 1을 구치소 밖에서 보냈다. “우울증”이라고 엄살을 부려 한 달 입원비만 2천만 원이 넘는 병원에서 지냈다.

반면 80만 원 월급을 끊지 말라고 투쟁에 나선 이랜드 노동자들은 무더기 구속됐다. 박성수의 구사대는 경찰 비호 하에 도끼와 죽봉까지 휘두르며 살인적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 GM대우차의 한 정규직 조합원은 비정규직 지회 활동에 연대하다 구사대 폭

행으로 안구와 고막이 파열됐고, 한 금속노조 활동가는 삼성SDI 농성장 앞에서 배후가 의심되는 식칼 테러를 당했다.

‘조폭’ 같은 노동 탄압을 저질러온 재벌들은 ‘조폭 총수’ 김승연이 받은 관대한 처분에 안심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듯 온갖 불법 비리와 무법천지 노동 탄압을 자행하는 재벌들이 ‘불법 파업’ 운운하며 노동자 투쟁을 비난하는 것만큼 역겨운 일은 없다.

승주

이랜드 노동자가 ‘다함께’에게

‘다함께’ 동지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랜드일반노조 노동자입니다. 항상 우리의 투쟁에 함께해 주셔서 힘이 됩니다. 고마움을 어찌 보답해야 할지 ….

저는 ‘다함께’ 회원 여러분들이 학생, 직장인 등이면서도 시간을 비워가며 우리의 투쟁에 연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지들의 연대를 볼 때마다 이 투쟁을 꼭 이기고, 다른 노동자들에게 연대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연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랜드 파업에 연대 감사드리며.

2007년 9월 1일
이랜드일반노동조합
조합원 드림

김정수 ‘평화여성회’ 대표의 수치스러운 청와대 행

이라크 파병과 한미FTA 등에 반대해온 김정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대표가 최근 청와대 제2부속실장으로 내정됐다. “반미 인사가 청와대 비서실”에 등용됐다는 우파들의 호들갑은 역겹지만 진보 운동의 입장에서 김정은 씨의 청와대 입성은 수치스런 배신 행위다.

거듭해서 파병을 강행해 온 친제국주의 정부에 참여해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김정수 씨의 꾀변은 군색하기만 할 뿐이다.

〈조선일보〉는 “김 씨는 청와대가 부르자 그토록 반대하던 대통령 품으로 달려갔다. 시민운동가라는 사람들의 본모습이 이렇다는 것은 이제 새삼스러운 것도 없다”며 조롱했다. 분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지금 노무현은 이라크 파병 재연장을 추진하고 한미FTA 비준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때에 김정수 씨의 처신은 그가 이제껏 참가해 온 운동의 대의를 스스로 부정함으로써 노무현 정부가 자신의 악행을 정당화하는 효과를 낼 뿐이다.

김정수 씨는 이제 배신자의 명예를 지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김정수 씨를 당장 대표에서 해임·제명해야 한다.

김용민

동호공고 폐교 시도

‘혐오’스러운 것은 비틀린 이 사회다

동호공고는 중구와 성동구의 경계에 자리한 학교다. 이 학교가 ‘혐오시설’이라는 집단민원이 제기되자 지난 8월 서울시교육청은 폐교 행정예고를 내렸다. 다행히 학교 구성원들의 서명운동과 비판 여론 때문에 폐교가 유보됐지만, 서울시 부교육감이 동호공고를 반드시 이전시키겠다고 공언하는 등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은 실업계 학생들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주민들은 ‘학생답지 않은’ 실업계 학생들의 흡연, 갈취, 오토바이 소음 등을 문제삼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곱지 않은 시선에 학생들은 상처를 받아 왔다. 학생들은 인근 아파트 단지 내 출입을 금지당했고, 수퍼마켓에서는 한

줄로 서서 수퍼마켓 주인과 2인 1조로 물건을 골라야 했다.

결국 정부가 나서 폐교를 추진하며 학생들을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내몬 것이다. 학생들은 이렇 거면 실업계를 왜 만들었냐고 반문한다.

모든 청소년들이 피라미드식 학벌체제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도록 강요받는 지금 사회에서

실업계 학생들은 ‘정상’ 궤도에서 이탈한 낙오자 취급을 받는다. 학생들은 이 사회에 만연한 노동에 대한 저평가와 학벌사회의 견고한 벽 때문에 두 번 세 번 울게 된다. 그리고 이들이 자라 비정규직이 되는 세상이다.

동호공고 학생들의 눈물어린 얼굴에서, 이 사회의 비틀린 우선순위가 만든 냉혹한 현실을 보게 된다. 여론이 잠잠해지길 기다려 다시 폐교를 시도할지 모른다. 학생들이 원하는 한 동호공고는 지켜져야 한다.

박조은미

이라크 파병 연장 시도 중단하라

김용민

지난 9월 6일, 정부는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자이툰 부대의 교대 병력 5백45명을 출국시켰다. 국회 동의에 따른 주둔 만료 시점을 불과 3개월 남짓 남겨 두고 절반 가까운 병력을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파병 재연장 의사를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해 11월 국방장관 김장수는 국회에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을 제출하며 “2007년 6월까지 자이툰 부대의 임무종결계획을 수립하고 임무종결 시한을 2007년 내로 한다”고 약속했다. 압도적 파병 반대 여론과 이를 의식한 국회 내 반발 때문에 그런 약속 없이는 파병 연장 동의안 통과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시 반전 운동이 경고했듯이 그러한 약속은 결국 공수표로 끝났다.

지난 6월 국방부가 내놓은 ‘자이툰 부대 임무종결 계획서’에는 철군 방침도, 철군 시한도 빠져 있었다. 또, 정부는 철군 계획은커녕 국회와 상의도 없이 임무종결 시점 결정을 일방적으로 9월로 미뤘다. 그리고는 9월이 되자마자 냉큼 교대 병력을 파견해 버린 것이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한 국회의원은 “미국무부 관계자들로부터 ‘한국이 아프가니스탄 주둔 동의·다산 부대는 철군시키고 자이툰 부대 주둔은 연장키로 했다’고 들었다”(〈프레시안〉)고 폭로했는데, 이는 한국 정부가 이미 미국과 파병 재연장에 합의했음을 보여 준다.

노무현의 파병 재연장 시도 덕분에 지난 7일 APEC 한미정상회담 자리는 화기애애했다. 부시는 바로 전날 자이툰 교대 병력을 출국시키고 온 노무현을 “친한 친구”라며 반겼다. 부시가 “지속적 협력”을 부탁하자 노무현은 당연하다는 듯 “동맹국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둘의 만남을 이렇게

고 배형규 목사 장례식 - 이라크에서 철군하지 않으면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될 수 있다

요약했다. “군사·안보 분야즉, 제국주의적 침략과 점령 정책]에서는 이미 더 이상 논의할 의제를 찾기 힘들 정도로 모든 현안이 제대로 합의·이행되고 있다는 데 평가를 같이했다.” 두 전범이 ‘이심전심’·‘의기투합’한 것이다.

배형규·심성민 씨의 죽음이 보여 주듯, 한국 정부의 침략 전쟁 동참과 파병 정책은 평범한 한국인들에게 재앙을 가져올 뿐이다. 이러한 재앙을 막을 유일한 길은 아프가니스탄뿐 아니라 이라크와

레바논에서도 한국군을 당장 철군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재앙을 부른 범죄 행각을 계속하려 한다.

국방부는 임무종결 시점 결정을 미루며 몇 가지 “판단 기준들” — 이라크 상황, 동맹국 동향 등 — 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기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고 있을 뿐이다.

이라크 ‘증파’는 완전히 실패했다. 미군 사망자 수는 되레 더 늘었고, 전체 폭력 건수도 줄지 않고 있다.

점령 실패가 명백해지자 한때 부시를 거들었던 ‘친구’들은 속속 이라크를 떠나고 있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말 3천여 명의 병력을 모두 철군했다. ‘의지의 동맹’의 마지막 주요 파트너인 호주의 존 하워드 총리는 곧 치러질 총선에서 ‘단계적 철군’을 내건 노동당에 패배할 것이 유력하다. 무엇보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파병 규모 2위인 영국조차 한때 4만 명이던 병력을 올해 안에 5천 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한국 기업 보호?

주류 언론들은 “자이툰 부대가 아르빌에서 철수하면 한국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중앙일보〉)며 정부의 파병 재연장 시도를 거든다.

그러나 “국내기업의 현지 진출은 수년이 지나도록 아직 별다른 성과가 없다.”(〈경향신문〉) 불안정한 이라크 상황 때문에 주요 재건 계약을 따낸 미국 기업들조차 사업을 정리하고 이라크에서 철수하고 있다.

정부는 석유개발사업 참여를 내세우지만 이라크 중앙 정부는 종파 간 갈등 속에 아직까지도 새 석유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라크 석유노동자들의 저항도 거세다. 설사 쿠르드족 자치정부와 맺은 계약이 있다 해도 그것들이 온전하게 이행될 거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미국이 이란으로 전쟁을 확대하더라도 하면 그나마 안정적이었던 이라크 북부도 하루아침에 불바다가 될 수 있다.

설혹 일부 이윤을 챙긴다 한들 그것은 수많은 무고한 이라크인들과 한국인 희생자들의 죽음과 고통을 대가로 한 ‘피묻은 떡고물’일 뿐이다.

배형규·심성민 씨의 죽음이 잊혀지기도 전에 이 파렴치한 정부는 또 다른 비극을 초래할 짓을 서슴없이 하려 한다. 반전 운동이 일치단결해 이 아비한 시도를 막아야 한다.

영국군 바스라궁 철수 점령 실패의 또 다른 증거

지난 2일 영국군이 바스라 시내 대통령궁(바스라궁)에서 철수했다. 언론들은 이번 조처가 “영국군의 이라크 철수가 본격화하는 신호”라고 말한다.

지난 2003년 이후 영국은 부시의 이라크 침략·점령의 으름가는 파트너였다. 따라서 영국이 이라크 점령에서 발을 뺀다면 부시에게는 커다란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영국 총리 고든 브라운은 이번 바스라궁 철수가 “철군”이 아닌 “[관할권] 이양”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믿을 사람은 거의 없다.

바스라궁 안에 있는 영국군 기지는 철군 직전까지도 계속 박격포 공격을 받았다.

이라크 상황에 정통한 〈인디펜던트〉의 패트릭 록번 기자는 이렇게 말한다. “영국군은 표면적으로 바스라의 통제권을 이라크 보안군에 넘길 예정이다. 그러나 사실 바스라에서 영국군이 통제하던 지역은 거의 없고, 이라크 보안군은 시아파 민병대가 운영하고 있다.”

“바스라 주민들과 민병대원들은 이것을 질서정연한 철수가 아니라 [점령군]의 치욕스런 패배로 여긴다.”(국제위기관리그룹(ICG))

영국 국방부의 한 관리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바스라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의 90퍼센트는 영국군을 겨냥한 것이었다”며 “[영국군이 바스라에서 떠

남으로써 오히려] 폭력의 수준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이라크 전후 계획에 참여한 영국군 최고위 장성 팀 크로스 소장도 영국군이 바스라궁에서 철수하던 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애초 미국의 이라크 정책이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다며 미국에 “실패”의 책임을 떠넘겼다.

지금 부시는 고든 브라운이 하필 때우 민감한 시기에 바스라궁 철수 결정을 내린 것에 크게 화가 나 있다.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 데이빗 페트레이어스가 부시의 ‘증파’ 전략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낼 시점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 — ‘증파’의 성과를 크게

왜곡·과장할 것이다 — 는 미국 내의 정치 위기와 철군 논란을 더욱 격화시킬 게 분명하다.

영국군의 바스라궁 철수는 단순히 군사적 패퇴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이라크에서 군사적 패배를 영국 정부에 대한 반대로 전환시킨 강력한 반전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노동당 지지자, 무슬림, 사회주의자 등 다양한 세력이 결집한 영국 ‘전쟁저지연합’은 지난 6년간 굳건하고 끈기있게 대중적 반전 운동을 건설해 왔다. 영국군 철수 움직임이 “이라크 상황보다 영국 내 상황과 훨씬 더 관련이 깊다”는 미 육군대장 잭 킨의 불평은 일리가 있는 셈이다.

한국의 반전 운동도 영국 반전 운동처럼 지속적이고 굳건한 대중 운동을 건설해 노무현 정부의 파병 정책에 맞서야 한다.

김용민

평화협정, 주한미군, 그리고 한반도 평화

김하영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는 “평화협정을 통해 한국전쟁을 종결”하겠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뤄져야 할 것이 있다는 데 부시의 강조점이 있다. “우리가 한국전쟁을 종결하는 평화조약에 서명할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는 김정일에게 달렸다. 김정일은 무기를 검증 가능하게 폐기해야 한다.”

부시는 평화협정의 조건으로 북한의 선(先)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내세운 것이다. “우리는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는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라는 크리스토퍼 힐의 한 주 전 언급과도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부시의 발언과 함께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그 앞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믿음 없이는 북한이 선(先) 핵폐기라는 조건을 이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부시가 나서서 핵폐기의 대가로 평화협정을 보장했다고는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그동안 미국이 여러 차례 발행한 바 있는 어음처럼 느껴질 수 있다.

미국은 2000년 공동공요니케에서도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제로 바꾸어 한국전쟁을 공식 종식”하는 것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4자회담이 진행되기도 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부시 정부는 평화협정을 위해서는 북한 핵이 먼저 폐기돼야 한다며 공을 북한에 넘겼지만, 북한 당국은 얼마든지 공을 다시 미국에 넘길 수도 있다. 북한 핵이 폐기되려면 미국이 의지를 보여야 한다면서 말이다.

동맹이 강화될수록 평화는 멀어진다 -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실제로, 테러지원국 해제와 경수로 지원 같은 문제가 가시화하기 전에 북한이 핵폐기 단계로 이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부시는 평화협정이 북한 핵폐기 여부에 달렸다고 했지만, 북한 핵폐기 여부는 미국 정부에 달린 셈이다.

신속기동군

선(先) 핵폐기라는 어려운 전제조건이 해결된다 해도 난관이 끝난 것은 아니다. 평화협정의 내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주한미군

문제가 대표적이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평화체제 문제와 주한미군은 관계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상의 일들은 한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상관할 바 아니라는 식이다.

하지만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 군사적 위협인 주한미군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남한 내 정치세력들도 이 문제에 대해 상이한 입장이므로 주한미군 문제는 어쨌든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물론 주한미군 문제에서 충돌만 예고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주한미군

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 변화의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1차 남북 정상회담의 전 과정을 총괄했다고 할 수 있는 전 통일부장관 임동원은 “북한은 대내외 선전용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해 왔으나, 실제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필요하다는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가 아니라 주한미군의 역할과 지위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입장은 이미 남북 정상 회담을 통해, 그리고 직접 미국 쪽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북한 태도 변화는 미국이 추진하는 주한미군 성격 변화와 맞아떨어진다. 미군은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불박이’가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싸고 대테러전 등에 투입될 수 있는 ‘신속기동군’으로 전환을 추진해 왔다.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이다.

평화협정 문제 논의 과정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와 주한미군 성격 변화가 맞물려 모종의 타협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어렵사리 타협이 이뤄진다고 해도, 주한미군 주둔이 유지되는 종류의 평화체제가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 있을까?

그동안 진보진영은 ‘전략적 유연성’ 합의의 위험을 경고해 왔다. 대만을 둘러싸고 장차 벌어질지 모를 중국과 미국의 충돌에서 한반도가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 쉐리그 해리슨도 “이런 상황[중국과 미국의 갈등]에서 남한이든 통일된 한국이든 한반도에 미군의 계속 주둔을 허용하는 것은 미일 관계가 심화하면 할수록 그만큼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 위험은 미군의 계속 주둔이 한반도 평화협정 하에 이뤄진다고 해도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 · 이명박의 공생과 범여권의 ‘유령 · 날림 경선’

노무현은 “깜도 안 되는 것 갖고 언론이 소설 쓴다”고 투덜댔지만, 정윤재 · 신정아 게이트는 갈수록 분명한 “깜”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신정아 게이트는 청와대 정책실장 변양균의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소설”을 써 온 것은 바로 노무현 쪽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사실 노무현 측근이 연루된 부패 의혹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노무현 자신의 대선 자금 의혹도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노무현이 ‘먹튀’ 론스타를 비호한다는 의혹도 있었다.

정윤재 · 신정아 게이트가 터지고 레임덕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노무현은 ‘이명박 고소’ 카드를 꺼내들었다. 우파인 이명박과 맞서 전선을 형성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뉴코아 · 이랜드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짓밟고, 자이툰 파병 연장까지 시도하는 노무현이 지지층을 재결집시키는 어려울 것이다.

노무현의 고소는 경선 승리 이후 갈팡질팡하던 이명박에게 되레 반가울 것이다. 이명박은 ‘반노무현’ 반사이익을 다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파와 중도파를 모두 잡으려는 좌충우돌, 박근혜와의 갈등, 잠복된 온갖 비리 의혹 때문에 이명박도 힘든 처지다.

이것은 범여권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잡탕선당’의 예비경선은 환멸만 키웠다. 그것은 부정 · 대리 접수가 판을 친 ‘유령참여 경선’이었고, 득표 결과가 오락가락하는 것도 모자라 몇 시간만에 순위가 뒤바뀐 ‘날림 경선’이었다.

예비경선을 통과한 ‘도토리들’은 이른바 ‘비노’(손학규 · 정동영)와 ‘친노’(이해찬 · 유시민 · 한명숙)로 분열해 있지만, 이념과 정책 등에서 별 차이가 없다. 이들은 모두 이라크 파병과 한미FTA를 찬성한다. 다가올 본경선에서 여론조사를 어떻게 반영할지 이전투구하는 모습은, 이명박과 박근혜의 아귀다툼을 닮아가고 있다.

단일화

최근 문국현의 부상은 이런 현실에서 개혁 염원 대중이 얼마나 대안에 목말랐는가를 잘 보여 준다. 문국현의 참모 김현태는 “‘될 대로 되라’며 손을 놓아 버리던 사람들 … ‘장기적으로 민주노동당을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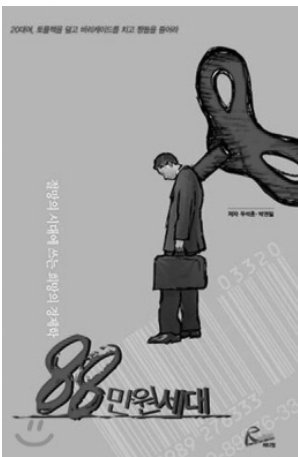
지하자’고 이탈했던 세력들도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국현은 10월중 신당을 창당해 비슷한 시기에 대선 후보를 확정짓는 대통합 민주신당 ·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문국현의 “서민 중심의 진짜 경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범여권과의 단일화를 통해서는 결코 이뤄질 수 없는 꿈이다.

문국현의 ‘진보적’ 비전은 여전히 검증 과정에 있는 반면, 다가오는 최종 결선에서 선출될 민주노동당 후보는 검증된 반전 · 반신자유주의 후보일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더 공세적으로 ‘반한나라당 · 반노무현’ 공백을 메우며 진보적 대안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

조명훈

누구에게 “바리케이드를 치고 짱돌을 던져야” 하나?



《88만 원 세대》
우석훈 · 박권일 | 레디앙

시도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이 책은 어린 나이에 IMF 위기를 접하고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을 감지한 세대인 현재의 20대가 처한 어려움을 공론화하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문제를 드러내려고 시도한다.

‘88만 원 세대’라는 제목도 눈에 확 띄고 의미심장하다. 현재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1백19만 원. 여기에 20대가 받는 평균적인 급여 비율 74퍼센트를 곱하면 88만 원이 된다. 이렇게 해서 현재의 20대는 ‘88만 원 세대’라고 명명됐다.

저자들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첫 섹스와 동거 그리고 부모로부터 독립이 유난히 늦은 ‘88만 원 세대’를 발견한다. 그리고 한국의 20대가 유달리 늦게 독립하는 이유는 그들의 유약함 때문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높은 주택비·대학등록금과 생계 때문에 10~20대의 대부분이 뛰어들게 되는 알바 시장의 열악함 등은 “10대들의 동거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20대에 독립을 하거나 더 일찍 동거를 시작하지 … 못하는 시스템은 경제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꽉 막혀 있고,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할 장치들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고 진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젊은 세대는 극한의 경쟁을 벌인다. 극소수의 승자를 제외한 나머지 패자들은 “개미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누구를 밀어 넣느냐, 즉 ‘누가 가장 먼저 잡아먹힐지’를 결정하는” 처절한 경쟁을 한다.

그러나 여기까지다. 저자들이 ‘88만 원



투쟁에 승리한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2005년) – 이들이 20대를 착취하나?

세대’의 문제를 “40대와 50대 남자가 주축이 된 한국 경제의 주도 세력이 10대를 인질로 잡고 20대를 착취하는 형국”이라고 규정하고, 이 문제의 해법을 “세대 간의 문제와 다음 세대의 문제라는 축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온갖 혼란이 발생한다.

세대 간 착취?

예를 들어, 저자들은 “KTX의 여승무원과 철도공사 이철 사장 사이에서 벌어진 정규직 전환 투쟁”을 “유신 세대와 20대가 갈등하는 … 대표적인 사례”로 본다.

대부분 유신 세대일 이랜드의 나이 든 여성 노동자들이나 외주화 위협을 받는 50~60대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철도공사 사장 이철과 함께 20대를 착취하고 있다는 것일까?

저자들 자신도 “[유신 세대는] 종신 고용 모델이 조기퇴직이나 명예퇴직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 20대만큼이나 위태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그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사회 안전망 속에서 불안한 노년을 기다리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또, 저자들은 교육 개혁을 이룬 프랑스의 68세대와 달리 우리 나라의 386세

대는 학벌사회를 오히려 강화해 역사에 대한 일종의 배신을 했다고 비판하지만, “이 잔혹극[입시경쟁]은 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 그들의 부모들[386세대]에게 결정적 타격을 끼치게” 된다고도 지적한다.

이렇듯 이 책은 앞에서 한 주장을 뒤에서 뒤집기 일쑤다. ‘세대 착취’라는 이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저자들 스스로 인정하듯이 “세대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개하다 보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기 쉽고 … 언젠든 사이버 과학이 될 위험이 있다.”

저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못 살게 된 것은 다 20대들이 게으르고, 부모들의 뺨뽕을 빼먹기 때문이다”는 주장을 ‘사이비 과학’이라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이런 주장의 거울 이미지인 ‘40~50대가 20대를 착취한다’는 이 책의 주장도 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계급을 분열시키는 ‘세대 착취’ 논리는 우파들에게 이용되기 십상이다. <조선일보>의 한 칼럼니스트는 이 책을 인용하며 “386과 포스트 386은 경쟁 사회의 원리에 따라 한판 승부를 벌일 때가 됐다”고 선언하고는 20대가 나서서 우파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악선동을 해댔다.

이 책을 출판한 인터넷 언론 <레디앙>의 핵심 칼럼니스트 이재영은 “386과 포

스트 386은 정치적으로든 이념적으로든 전혀 대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런 반박은 이 책의 핵심 논지인 ‘세대 착취’도 반박하는 것이다.

다행히도 저자들은 ‘세대 착취’ 논리를 끝까지 밀어붙여 계급 분열적 주장에 도달하지는 않는다. 이 책의 대안은 “단절된 세대간 소통의 통로를 열어야 한다”는 정도다.

저자들은 “20대여, 토틀책을 덮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짱돌을 들어라” 하고 선동한다. 그러나 그 내용은 20대의 1만 명 정도가 기성세대가 운영하는 스타벅스에 가기를 거부하고 대신 20대가 운영하는 커피숍에 가겠다고 선언하는 상징적인 반항이다. 오히려 20대에게 ‘사회 문제에 관심 좀 가져라’ 하고 말하는 여느 훈계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게 문제라면 문제다.

바리케이드

또, 저자들의 대안은 새롭지도 급진적이지도 않다. ‘세대 갈등’을 ‘세대 화합’으로 바꾸길 바라는 이들은 불공정한 현실의 원인인 (자본의) 세계화를 인정하고 혁명이라는 방법은 통할 수 없다고 전제한다.

결국,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은 “기성세대 혹은 기성세대의 누군가에게 갈 몫을” 일부 돌려, 감원 대신 감봉을 택해 일자리를 나누는 스웨덴 볼보주의 정책을 도입하고, 20대 창업지원금으로 2조 원을 확보하거나 지자체가 알바 보조금을 지원하자는 것들이다.

저자들이 뭉뚱그려 말하는 “기성세대의 누군가”에는 지배 계급도 있고 노동자도 있다. 이 문제에 분명하게 답하지 않기 때문에 이 책의 대안은 노무현 정부가 줄곧 주장해 온 ‘대기업·정규직 양보론’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비록 저자들이 ‘88만 원 세대’ 문제의 주요 책임을 노무현 정부에 돌리고 있지만 말이다.

시작은 창대했지만 그 끝이 미약하다. 저자들이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과 ‘청백전’(청년백수 전성시대)을 화두로 글을 쓰기 시작했더라도, ‘사오정’(45세가 정년)과 ‘오륙도’(56세까지 직장엔 남아있으면 도둑놈)도 염두에 뒀더라면 꽤 많은 글이 나왔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88만 원 세대’의 문제가 세대 간 문제가 아니라 계급 문제라는 것도 더 분명하게 드러났을 것이다.

강동훈

〈관타나모로 가는 길〉 특별 상영

아프가니스탄과 관타나모 수용소의 처절한 상황을 폭로한 영화를 3천 원에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일시: 9월 14일(금) 저녁 7시
장소: 스포지 하우스
주최: 파병반대국민행동/민주노동당 파병반대대책위



● 나지 알 알리 만평 전시회

“팔레스타인의 양심”인 나지 알 알리는 미국과 이스라엘 제국주의의 탐욕과 위선을 고발하고 팔레스타인 민중의 고통을 절절히 그려냈다.

일시: 9월 5일~18일
장소: 서울 인사동 ‘평화공간’



문국현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김인식

민주노동당 진보대연합 특별위원회 위원

문국현의 등장과 부상은 한국 주류 정치, 특히 범여권이 겪고 있는 위기를 단적으로 요약해 보여 준다.

이런 틈을 타 제3의 인물이 등장한 것은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는 현상이다. 문제는 문국현의등장이 민주노동당에 미칠 효과이다.

민주노동당 내 상당수 사람들은 ‘문국현 현상’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지금 문국현의 지지층을 보면 “민노당 지지층이라든지, 진보적인 성향층에서 높게 나온다.”(문국현의 참모이자 전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김현태)

이에 대한 한 반응은 문국현에 대한 심상정 후보의 비판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비판의 내용은 구구절절 옳은 것이었지만, 주장에 의한 비판이 행동을 통한 입증시기로까지 나아갔다면 그 비판이 더한층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당 일각에서는 문국현이 민주노동당의 4대 진보 기준 — 신자유주의와 한미FTA 반대, 비정규직 차별 철폐, 전쟁 반대와 한반도 평화, 국가보안법 폐지 — 에 동의한다면 진보대연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물론 문국현은 신자유주의의 극단적 양상이나 재벌의 “나쁜 관행”에 대해서는 꽤 비판적인 듯하다. 그러나 클린턴의 “기업형 정부론”과 앙겔라 메르켈(독일 총리)의 “창조적 정부론” 같은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적극 옹호한다.

문국현이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에 비판적인 것은 높이 사줄 만하다. 그의 주장이 일관성을 가지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계가 요구할 비정규직 법안 전면 재개정을 적극 지지해야 할 것이다.

한미FTA 문제에서 문국현의 태도는 모호하다. 한미FTA에 대해 문국현은 투자자-정부 제소 제도, 농업 개방 등은 “아주 잘

못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와 동시에,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 증대 효과 발생, 북미수교 유도 가능성이 한미FTA의 장점이라고 본다. 그래서 “비준은 연기해 놓고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많은 보완 조치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의 기준

물론 모호한 입장이라 해도 한미FTA 반대 공동전선에 함께 설 수 있다. 사실 한미FTA 저지 전선에는 원칙적 반대론보다는 모호한 입장이 다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국현은 지금까지 한미FTA 반대 운동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이 점이 지난 봄에 한미FTA에 반대해 단식까지 한 천정배와 다르다.

문국현에 대한 ‘비판’과 함께 ‘행동을 통한 입증시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신자유주의 정책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한미FTA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문국현을 반신자유주의 후보라고 부르는 것은 어색하다.

한편, 문국현은 제국주의와 전쟁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실 “문 후보의 비전은 경제 민주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조차 “자본의 ‘윤리적 각성’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려 한다.(정치평론가 유창선, <오마이뉴스> 9월 7일치)

이처럼 운동 속에서 정치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자본가 출신의 정치인(“좋은” 자본가일지라도 자본가는 자본가다)을 진보대연합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선부르다.

문국현은 민주노동당이 지난 몇 달 동안

진보 세력들에게 진보대연합을 제안했을 때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문국현의 정치 일정에는 민주노동당과의 연합이 포함돼 있지 않다. 그는 범여권과 일정하게 선을 긋지만, 범여권과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99퍼센트”라고 답했다.

반응 없는 상대를 향해 일방적 구애를 할 까닭도 없는 데다, 민주노동당도 이미 상당히 진도를 나아간 상태다. 이번 주말이면 민주노동당이 자체 후보를 최종 선출한다. 그리 되면 당 내에서 후보 단일화(진보대연합의 핵심 의제 중 하나)를 거론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듯하다. 그렇더라도 민주노동당이 포괄하지 못하는 진보 세력들과 연합해 대선에 도전한다는 진보대연합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선거 막판까지도 계속돼야 한다.

그럼에도 문국현과 범여권의 후보 단일화를 깨뜨리기 위해서라도 문국현에게 진보대연합을 제안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이 아니라 자기기만이 될 공산이 크다.

문국현이 일부 피지배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사장 출신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문국현은 조만간 창당할 신당에 합류할 세력으로 “양심적인 지역 지도자, 전문가, 기업인, 학자, 그리고 일부 정치인이나 관료들”을 꼽았다.

문국현이 범여권을 넘겨다 보는 것도 이런 사회적 기반과 관련 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문국현의 계급 화해 정책이 빚어낼 모순을 예리하게 파고들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문국현의 자본가적 행보에 대해서는 망설임 없이 날카롭게 비판하고, 그가 피지배층의 입장에 선 발언을 한다면 지지하되 말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 줄 것을 제안하고 요구하는 것이다. 행동을 통한 입증 과정은 우리의 폭로와 비판을 더 효과적이게 해 줄 것이며, 문국현과 그의 피지배층 기반 사이의 모순을 드러내 최종적으로 균열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진보정당다웠던 민주노동당 경선 1차 투표

9월 9일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경선 1차 투표에서 권영길 후보는 비록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49.37퍼센트라는 높은 득표율(총 1만 9천53표)을 기록했다.

권 후보는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을 지내면서 1997년 1월 대중파업을 이끌었고, 민주노동당 창당에 앞장선 데 이어 1997년과 2002년 두 차례 대선에 출마해 진보정당의 가치를 널리 알렸고, 2004년 경남 창원에서 당선한 뒤 주류 정치를 비판해 왔다.

이번 선거 결과는 이런 권 후보에 대해 여전히 많은 당원들이 신뢰와 지지를 보내고 있음을 보여 줬다. 권 후보는 당내 최대 경향인 자민통의 지지를 받았다.

애초 약체로 분류됐던 심상정 후보가 ‘심바람’을 일으키며 권영길 후보의 결선투표 상대가 됐다. 심상정 후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미FTA 반대 운동에 앞장서 왔는데 이번 선거에서 이 점이 당원들에게 크게 작용한 듯하다. 심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노총 중앙파의 조직적 지원도 받았다.

한편, 주류 정치권과 재벌의 위선·비리를 시원스럽게 폭로하며 당의 성장에 기여해 온 노회찬 후보는 예상보다 낮은 득표를 했다. 조직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 등 여러 요인이 있었겠지만, 자민통 경향 당원들이 권영길 후보를 지지한 것에 대해 노 선본 일각에서 ‘내무반 투표’라는 식으로 비난한 것이 당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 것 같다.

민주노동당의 이번 경선 과정은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진행한 지저분한 경선과는 커다란 차이를 드러냈다. 세 후보 모두 주류 정당들이 그동안 전혀 제기하지 않은 의제들 — 한미FTA 반대,

비정규직 철폐,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철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복지 확대 등 — 을 선명히 제기했다.

비록 주류 언론의 악의적인 외면 때문에 민주노동당 경선 과정이 당 밖에서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지만, 세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주요하게 제기한 의제들은 진보를 바라는 사람들의 염원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이제 결선에서 누가 당선하든, 그 후보는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의 사기꾼들과 맞서 싸우는 데서 조금도 손색이 없을 후보라는 점은 분명하다. 치열한 결선투표가 끝난 뒤 민주노동당 당원들은 향후 벌어질 투쟁과 대선 운동에서 진보진영의 승리를 위해 단결해야 할 것이다.

정진희

한미FTA 비준안 통과를 저지하라

이정구

한미FTA 저지 범국본(이하 범국본) 등의 공개 토론 요구를 한사코 거부하던 노무현 정부가 9월 7일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지마’ 타결과 체결에 이어서 ‘문지마’ 비준까지 강행하려는 것이다.

정태인 민주노동당 한미FTA저지사업본부 본부장이 지적했듯이 “한미FTA 협상 타결 선언 이후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성과 부풀리기’와 ‘자료 감추기’밖에 없었다.”

한미FTA가 가져 올 재앙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다.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이 계속 발견됐지만 미국·한국 정부는 SRM까지 수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한미FTA 비준동의안 통과는 나아가 비정규직 확대, 고용불안 심화, 공공서비스 파괴, 양극화 심화를 뜻한다.

노무현은 “한미 양국 모두 비준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무현이 아무리 ‘도리’를 다해도 부시는 답하기 힘든 처지다. 보호무역주의적인 민주당이 다수이고 부시가 레임덕에 빠진 상황에서 미국 의회에서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될



한미FTA 비준을 좌절시킨다면 노무현과 신자유주의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패배를 안길 수 있다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미국 의회는 심지어 페루와 콜롬비아 정부가 FTA 비준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후에도 재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 주류 정치권은 대부분 한미FTA를 찬성하고 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

은 말할 것도 없고, 대통합민주신당의 예비경선을 통과한 5명의 후보 모두 한미FTA에 찬성한다. 이런 상황에서 반한나라당을 위해서 범여권을 지지하자는 논리는 공색하다. 이런 태도는 한미FTA·신자유주의 추진 세력을 도와주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한미FTA 비준안 통과가 쉽지 않은 양을 것이다.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도 반FTA 여론의 눈치를 살펴야 하고, 노무현은 레임덕 상태이기 때문이다.

9월 10일에는 여야 의원 82명의 서명으로 ‘FTA 국정조사 요구안’이 제출됐다. 범국본과 민주노동당은 국정조사를 활용해 한미FTA를 폭로하고 운동을 확대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물론 노무현과 한나라당, 범여권이 갑자기 비준안 통과를 강행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저지 파업을 지도한 금속노조 간부를 연달아 구속하는 등 한미FTA 반대 운동 탄압을 계속해 왔다. 지금도 정광훈·오종렬 두 공동대표가 구속돼 있다.

따라서 범국본과 한미FTA 반대 운동진영은 탄압에 맞서며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대규모 대중 행동을 건설해야 한다. 금속노조도 한미FTA 반대 2차 파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민주노총 차원으로 파업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

범국본이 제안해서 더 다양한 단체들로 확대한다는 11월 ‘민중총궐기’도 대규모로 성공시켜야 한다. 한미FTA 비준을 저지하고 이윤보다 중요한 가치들을 지켜내야 한다.

시드니 아펙 정상회의

전쟁 동맹의 위기를 드러내다

호주 항만노조원 워렌 스미스의 말처럼 “아펙은 전쟁, 임금 저하, 핵발전소, 그리고 대기업의 이윤을 뜻한다.”

호주 정부는 아펙 정상회의 경호예산으로만 1천7백억 원을 썼다. 그러나 이 회의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중요한 의제였던 기후변화 문제만 봐도 그렇다. 아펙 회의에 모인 지배자들은 2030년까지 에너지 집적도를 25퍼센트 감축하고 2천만 헥타르의 숲을 복원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사기일 뿐이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도 없고 구속력도 없다. 선언 초안 제안자가 온실가스 1인당 배출량 세계 1위인 오스트레일리아와 총배출량 세계 1위인 미국이다. 두 나라 모두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했다.

이번 아펙 회의도 예년처럼 “맹탕으로 막을 내렸다”(《한국일보》)지만 지난 회의들과 비교해 두드러진 점은 있다. 첫째, 제국주의 국가간 갈등이 심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 최초로 미국·일본·호주 3국 정상회담이 열렸다. 언론은 중국 포위 전략이 주된 의제였다고 보도했다. 미국·

일본·호주 3각 동맹은 회의 기간에 ‘말라바 2007’ 합동해상훈련을 실시했고, 이 훈련에 인도와 싱가포르를 참가시켜 중국을 자극하기도 했다.

또, 미국은 중국에게 위안화 절상, 무역수지 개선, 중국산 상품 품질 개선, 인권 개선 등을 요구하며 압박하기도 했다. 대만 문제에서 부시는 “현 상태를 변화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반대한다”고 했다. 대만더러 유엔 가입 문제에서 자제하라는 말이기도 했지만, 결국 중국에 강력한 경고를 한 셈이다.

이에 맞서 중국은 “대만의 유엔가입 국

민투표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중·미 정상회담 직전 대만을 겨냥한 대규모 상륙훈련을 벌이기도 했다.

러시아도 아시아 진출을 모색하려 한다. 아펙 정상회담 직전에 푸틴은 인도네시아에 킬로급 잠수함과 탱크, 헬기 등 9천4백억 원 어치의 무기를 판매했다. 최근 러시아는 미국을 제치고 아시아에서 최대 무기 판매국이 됐다. 또, 러시아는 옛 소련과 함께 봉괴한 항공모함 전단을 부활시켜 2015년부터 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둘째, 부시와 그 졸개들이 처한 절박한

정치적 위기가 선명히 드러났다. 부시·아베·하워드의 만남은 지지율 30퍼센트짜리들의 회의였다. 부시는 아베를 만나 테러조치특별법 연장에서 후퇴하지 말 것을 간청했고, 하워드를 만나서는 호주군의 이라크 주둔 연장을 요청했다.

사임 위기에 있는 아베는 “정권을 걸고” “인도양에서 급유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부시에게 다짐했다. 그러나 최근 선거에서 참의원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 당수 오자와 이치로는 “급유 지원 활동 지속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하워드도 연말 총선 패배가 유력하다. 그래서 부시는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인 노동당수 케빈 러드를 만나 파병 연장을 구걸했지만, 그에게서 “단계적 철군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말만 들어야 했다. 이런 데는 아래로부터 압력이 결정적이었다.

한규한

1만 명이 반전 시위를 벌이다

정상회담 첫 날인 9월 8일, 시드니에서 약 1만 명이 정상회담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

조지 부시가 방문하면서 하워드 정부의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점령 지원이 중요한 쟁점이 된 덕분이었다. 동시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호주 정부가 사실상의 경찰 국가 선언을 한 것에 용감하게 맞서기로 한 시위대의 결단도 시위의 성공에 매우 중요했다.

경찰은 매우 호전적으로 행동했다. 호주

의 인물 명단(블랙리스트) 작성을 포함해 경찰 권한이 확대됐다. 대표적 학생·반전 활동가들 다수가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는데, 이들은 시내 중심가 대부분이 포함된 보안 지역에 진입하면 바로 체포됐다. 경찰은 보안 지역에서 모든 집회·시위를 금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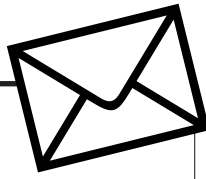
그러나 이런 조처들이 시위대를 고립시키기는커녕, 경찰의 행동에 분노한 사람들이 시위에 대거 참가하면서 시위 규모가 예

상보다 더 커졌다.

시위대는 하워드 정부의 ‘테러와의 전쟁’ 지원 문제를 핵심적으로 제기했다. 이를 통해 하워드의 패배가 유력해 보이는 다가올 총선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쟁점으로 만들기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우리는 거리의 도전 정신을 후임 노동당 정부가 이라크 철군 약속을 지키도록 압력을 넣는 투쟁으로 연결시키고, 아프가니스탄 파병군의 철수도 요구할 것이다.

제임스 서클
(오스트레일리아 국제사회주의자)



■ 감옥에서 온 편지

〈맞불〉 54호에 독자편지를 보냈던 화물연대 대구경북지부 지부장 이오식 동지가 다시 금 편지를 보내 왔다. 이오식 동지는 지난 8월 14일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고 옥중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김동윤 열사의 유서가 남겨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 승주 동지의 답장을 보고서야 번득 생각이 났습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답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처럼 빗소리가 가깝게 들리는 날은, 온 가족의 조직적인 거짓말 전술로 [제가] 아직 수배중인 걸로만 알고 계시는 여든 가까운 어머니가 간절하게 그리워집니다. 초저녁잠이 많으셔서 지금은 주무시겠네요.

우리 지부 소속 조합원으로 현대자동차 차체 부품 1차 밴드인 일지테크라는 회사의 생산품을 운송하던 28명의 동지들이 몽땅 부당해고된 지 만 1년이 됐습니다. 28명 중에 9명이나 구속됐습니다. 민주공화국에 살면서 자신이 왜 구속되는지도 모른 채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 게 지금의 한국 사회입니다.

비록 그 회사 집을 신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맞이할 그 날을 위해 동지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동지들이 무척 그리운 밤입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십시오. “단결 투쟁!”

대구구치소 한 평 독거에서
이오식 드림

〈맞불〉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즉각 철군이 23명을 살리는 길이다”라는 표지 제목을 읽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노사모’ 활동하다 노무현이 파병 강행하는 것을 보고 돌아서기 시작했죠.

여러 개의 기관지를 받아보고 있는데, 가장 재미있고 유익한 기관지라고 생각합니다. 팻말만 잘 만드는 단체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확 났습니다. 왜 집회 현장에 ‘다함께’ 팻말이 눈에 띄잖아요. 벤치마킹 많이 했죠.

〈맞불〉 덕에 교양이 팍팍 쌓이고 있습니다. 사람은 확실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요. 〈맞불〉 동지들, 고맙습니다.

이랜드일반노동조합 위원장
김경옥

점거 농성 지지 방문을 다녀와서

나는 지난 8월 31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국가인권위 농성에 지지 방문을 다녀왔다. 정수운 동지는 팔을 심하게 다쳤고, 채성미 동지는 임신중인데도 단호하게 투쟁하고 있었다.

김은희 동지와 임정재 동지는 자신이 ‘비정규직보호법’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고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을 보면서 비정규직 악법의 문제를 깨닫게 됐다. 더불어 함께하는 연대가 있을 때 꼭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자

신감도 생겼다고 말했다.

뉴코아·이랜드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호한 단결 투쟁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 투쟁의 영감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이 동지들은 뉴코아·이랜드 투쟁뿐 아니라 각종 비정규직 투쟁, 반전 집회 등에 빠짐없이 다니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 정수운 동지에게 이랜드 집회건으로 출두요구서가 발부됐다고 했다. 정말이지 노무현 정부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더러운 수작을 부리고 있다.



연대투쟁만이 더러운 수작과 탄압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조민호

소식/보고

현대차 무분규 타결의 문제점

사장 윤여철이 노조를 방문한 직후 나온 파업 유보 선언은 정몽구 재판을 앞두고 사측이 내민 타협의 손을 노조 지도부가 잡은 셈이다. 실제로 이상욱 지도부는 정몽구 ‘유전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단호한 규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물론 이번에 사측은 상여금 인상, 정년 연장, 주간연속2교대제와 함께 조합원 1인당 1년에 거의 9백만 원 정도 임금 인상 효과를 내는 큰 양보를 했다.

이것이 큰 성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뉴코아·이랜드 투쟁이 투쟁 물결을 불러올 가능성이 커지고, 추석 집중 투쟁까지 선언한 마당에 대표적 강성 노조인 현대차 노조까지 파업에 들어가는 상황을 정부와 기업주들이 우려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적인 좌파 노조 지도부인 이상욱 지도부가 파업을 유보하면서까지 협상에 치중한 것은 매우 아쉽다.

현대차지부 지도부는 이제 뉴코아·이랜드 추석 집중 투쟁 등에 연대하며 전체 노동운동에 기여해야만 한다. 정동석(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대의원)

굳이 그 때 정몽구 쪽이 내민 손을 잡아줘야 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올해 임단협을 무분규로 끝냈다. 언론은 무분규라는 측면을 부각하고 과장하지만 분규없이 타결된 것이지 ‘무쟁의 선언’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분규 타결 자체는 매우 아쉽고 비판받을 일이다. 이번 타결은 몇 가지 조건이 가려온 상황 때문이었다. 먼저 현대차 사측은 매년 순이익을 수조 원씩 올려 왔고, 이번 상반기에도 순이익을 9천여억 원이나

올렸다.

무엇보다 현대차 회장 정몽구의 항소심 재판 선고가 다가오고 있었다. 범죄자 정몽구는 파업이 선고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줄까 봐 걱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지부 이상욱 지도부가 9월 4일 예정된 파업을 유보하고 협상에 치중한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 사측이 최종 양보안을 내기도 전에, 조합원들이 민주적 투표를 통해 결정한 파업을 유보한 것이다.

2차 파업을 준비하는 코스콤비정규지부

노무현의 비정규직 악법 시행을 앞두고 코스콤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부려 먹기 위해 ‘진성’ 도급회사를 급조,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감추려 했다. 이에 맞서 온갖 차별과 멸시에 고통 받아 온 코스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저항에 나서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1차 파업으로 쟁취한 ‘7·4 기본합의서’를 사측이 내팽개치자 9월 12일 ‘정규직으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2차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비정규직 철폐라는 거대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바람을 타서, 우리도 우리의 연을 하늘 높이 날려봅시다”라고 외치는 코스콤 노동자들은 이랜드 집중 투쟁 시기에 맞춘 투쟁 돌입으로 시너지 효과를 바라고 있다.

이 투쟁에 정규직 위주로 조직된 사무금융연맹과 증권노조가 적극 연대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같은 코스콤 정규직노조 지도부는 아쉽게도 여전히 연대하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이 갈수록 확대되며 정규직·비정규직 모두를 위협하고 있는 증권업계에서 코스콤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가 실현된다면 그보다 멋진 일은 없을 것이다.

오정숙



정성진의 맑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토빈세 또는 헤지펀드 규제가 경제위기에 대한 진보적 대안일까?

[편집자 주] 토빈세 도입이나 투기적 금융 자본에 대한 규제는 금융시장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개혁이다. 물론 그 효과를 과장해서는 안 되지만 말이다.(알렉스 캘리니코스, 《반자본주의 선언》)

정성진 교수는 이 글에서 후자에 전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파생금융상품의 존재 때문에 투기적 금융자본 규제가 불가능하며, 가능하더라도 자본주의 경제의 불안정 격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9월 7일 미국 노동부는 2003년 이후 계속 증가했던 미국의 일자리가 지난 7~8월 처음으로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에서 비롯한 세계 금융위기가 이제 세계 실물경제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는 신호다.

그런데 이번 세계 금융위기와 관련해, CDO(부채담보부 증권), MBS(모기지 담보부 증권),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 같은 신종 파생금융상품과 이들에 투자한 헤지펀드·투자은행 등이 이른바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부 진보진영도 이번 금융위기를 지난 세기말 이후 가속화된 금융 규제완화의 산물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토빈세(Tobin Tax) 도입을 통한 투기적 금융 거래 규제, 헤지펀드 등 투기적 금융 자본에 대한 규제 등을 주장한다(예컨대, 심상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과 임수강 씨가 <레디앙>에 기고한 글을 보라).

이처럼 위기의 원인을 금융이나 투기에 있다고 보고,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투기근절과 금융자본 규제에서 찾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위기에 대한 피상적인 인식이다.

자본주의에서 경제위기는 투기적이든 생산적이든, 자본주의의 특정한 형태나 형태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로 표현되는 자본주의 자체의 내재적 모순에서 비롯한다.(<참세상>(8.14)과 <맞붙>(8.21)에 실린 기사를 참조하시오.)

오늘날 금융위기는 0.1퍼센트 거래세율 정도의 토빈세로는 극복할 수도 없고 예방할 수도 없다. 그동안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졌듯이, 토빈세는 소폭의 가격 변동에 대한 투기만을 억제할 수 있을 뿐이며 투기 자체는 억제할 수 없다.

금융시장이 큰 폭으로 요동쳐서 투기 규제가 절실히 요구되는 금융위기 국면에서는 토빈세는 정작 무용지물이 된다. 환율 변동폭이 토빈세율을 초과할 경우, 토빈세를 물려도 투기적 거래가 극성을 부릴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토빈세는 모든 단기 외환거래에 대한 과세인데, 그 단기 외환거래가 투기적 거래인지 아니면 “헤지”(hedge, 위험회피) 거래인지를 구별할 수 없다는 점에

서도 문제가 있다. 만약 토빈세 도입으로 진정한 의미의 “헤지”까지 규제될 경우, 금융위기의 위험은 감소되기는커녕 도리어 증대될 것이다.

생산적 투자

토빈세를 포함한 케인스주의적 자본 통제 정책은 투기적 금융자본의 국제 이동을 규제하면 그 금융자본이 국내의 생산적 투자로 전환돼 고용이 증대되고 경제성장이 촉진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하지만 이 가정 역시 비현실적이다. 예컨대 개량주의 정당이 집권해 자본 통제를 실시한다 할지라도, 국내에 묶인 화폐자본이 생산적 투자로 연결되려면 이 자본에 최소한 세계 평균 수준의 이윤율이 보장돼야 한다. 그동안 집권한 개량주의 정당이 거의 예외 없이 노동자 계급에게 “고통분담”과 임금 억제, 즉 초과착취 감수를 강요하는 “배신”을 때린 것은 이 때문이다.

토빈세 등 각종의 케인스주의적 자본 통제 정책은 개량주의자들이 기대하듯이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희망하듯이 자본주의 생산관계에 대한 도전으로 나아갈 수도 없다.

무엇보다 이번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에서 보듯이 헤지펀드가 애호하는 파생금융상품의 존재 자체가 토빈세의 목

적, 즉 투기적 금융자본 규제를 기술적 차원에서도 실행 불가능하게 한다. 파생금융상품 투자가 활발해질 경우, “핫머니” 투기와 장기적이고 생산적인 투자의 구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사실 자본주의에서 투기와 투자를 엄밀하게 구별하는 것 자체가 자의적이다. 그런데도 파생금융상품과 헤지펀드를 단지 투기의 수단이나 금융 불안정의 주범으로만 간주하고 21세기 자본주의에서 이들이 수행하고 있는 필수적 기능을 보지 못할 경우, 위기에 대한 올바른 진보적 대안은 강구될 수 없다.

브라이언(D. Bryan)에 따르면, 19세기 말 20세기 초 국제금본위제에서는 금이 세계금융시장의 조정자 구실을 수행했다. 그런데, 1971년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이후, 즉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한 후에는, 이 기능을 다름 아닌 파생금융상품이 수행하게 됐다.

파생금융상품은 마치 GPS 기능을 수행하는 인공위성들처럼 수많은 상이한 금융자산들의 상대가치를 계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선물, 옵션, 스왑 등에서 보듯이 파생금융상품은 각종 금융자산의 현재 가격과 미래 가격을 연동시키고 상이한 종류의 금융자산들의 가격을 연결시킴으로써 위험과 변동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을 조정한다. 파생금융상품은 금융자산 자체를 거래하지 않고도 금융자산

의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산·전가시켜 투기 위험에 완충 수단을 제공한다.

파생금융상품

따라서, 파생금융상품이 투기를 조장해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이를 제거하는 것은, 곧 글로벌 금융시장의 조정자를 제거하는 것이고 그 결과 자본주의 경제의 불안정성은 도리어 격화될 것이다. 파생금융상품은 오늘날 자본주의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파생금융상품은 글로벌 수준에서 금융자산 가격의 시간적·공간적 비교 평가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을 심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 결과 가격차와 가격 변동을 이용한 투기적 금융이득이 발생할 소지는 도리어 줄어든다.

파생금융상품이 보편화되면서, 금융이득을 포함한 자본가계급의 모든 이윤의 원천이 노동자계급을 착취해 얻은 잉여가치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파생금융상품은 나아가 모든 자본가들과 금융자산이 경쟁의 규범에 충실하게 복무할 것을 요구한다. 예컨대 시장 성과가 부진한 자본가들과 금융자산에게는 구조조정이 강요된다.

이른바 “노동시장의 유연화”란 것도 그 본질은, 금융자산 가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금을 이윤율에 신축적으로 연동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파생금융상품의 문제를 진정으로 제기할 경우, 오늘날 자본주의의 가치 계산방식의 문제와 노동자계급에 대한 글로벌 착취체제의 문제, 즉 오늘날 자본주의의 문제 그 자체와 정면으로 마주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생산관계와 소유관계, 계급 구조는 전혀 손대지 않고, 카지노판 파생금융상품 시장과 헤지펀드를 토빈세 등으로 규제해 건전하고 생산적인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구현하자는 케인스주의적 자본 통제 정책은, “황금시대”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을 재현해 주기는 커녕 더욱 불안정화되고 더욱 착취적인 자본주의를 낳는 몽상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자본주의에서 경제 위기는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의 필연적 표현이기 때문에, 경제위기의 근본적 극복은 자본주의 그 자체의 폐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진보진영의 경제 위기 극복 전략의 핵심은, 자본의 이동성과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그 자체와 대결하는 것이 돼야 한다.

정성진 경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마르크스와 한국경제》,
《마르크스와 트로츠키》의 저자이고,
《반자본주의 선언》,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 등의 역자이다.

기아차 비정규직 파업은 정말로 무엇을 남겼나

최일봉

지난 호 〈맞불〉의 전지훈 동지 기사 “9일 간의 영웅적인 점거 파업이 남긴 것”은 기아차 정규직 노조 지도자들과 활동가들에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상기시키고 있다. 비록 글 끝 부분에서 “기아차의 정규직·비정규직 투사들은 이번 투쟁에서 쓰러린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글의 어디에도 비정규직 활동가들에게 제시하는 교훈은 없다.

이는 기아차 회원 동지들과 전지훈 동지들이 이번 투쟁을 분석하는 데서 초전투적 비정규직 활동가들에게 지나치게 타협한 소치이다. ‘초전투적’이라 함은 전투성의 도가 지나쳐 현장조합원 선진 부분의 정서와도 접점을 형성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원칙이나 강령과 달리 전술은 대중의 후진적 부분에 영합하는 기회주의로 빠져서도 안 되지만, 대중의 선진 부분보다 앞질러 나아가서도 안 되는 것이다. 전술은 더도 덜도 말고 대중의 선진 부분과 보조를 같이해야 한다.

공감 얻기

역설이게도, 활동가들은 이번 점거 파업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 밖으로 성공을 거두자 원래 이틀로 예정했던 파업을 연장했고, 전투성에 도취해 정규직 조합원의 선진적 부분과도 정서적으로 유리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그동안 비정규직 활동가들이 암묵적·명시적으로 갖고 있던 정규직 조합원들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작용했던 듯하다. 그 결과 파업 참가자들은 고립됐고, 고용 안정화와 차별 시정 요구들을 성취하지 못했다. 특히 아흐레 동안 공장을 멈추게 한 파업치고는 너무도 얻은 게 없다.

원칙이나 강령과 달리 전술은 대중의 후진적 부분에 영합하는 기회주의로 빠져서도 안 되지만 대중의 선진 부분보다 앞질러 나아가서도 안 되는 것이다



기아차 비정규직 활동가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효과적 전술이 무엇인지 숙고해야 했다

회사측이 너무나 단호해서 얻은 게 없다고 우리 스스로 위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규직 노조원의 극소수인 ‘금속 노동자의 힘’(이하 금속힘) 등 전투적 노동자 단체들의 용감하고 헌신적인 지지를 넘어 정규직 노조원 다수의 동정과 그 선진 대중의 실질적 지지를 받았다면 회사측은 큰 압력을 느꼈을 것이다.

이것이 회사측의 양보를 보증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양보의 가능성을 크게 높였을 것임은 틀림없다. 특히 구사대(5백여 명 규모로, 사무직과 중하급 관리자가 70퍼센트를 차지했다)에 대한 보수적 노동자들의 지지를 약화시켜 구사대의 중동과 광분을 막거나 미미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어쩌면 점거의 효과를 없애기 위한 회사측

과 구사대의 ‘라인 직접 연결 시도’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가정을 너무 진전시키는 것은 탁상공론이 될 것이다. 확실한 것은, 정규직 노조원 다수의 공감을 얻었다면 이번 파업은 노동자의 단결이라는 노동자 투쟁의 최대 수확을 거뒀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점은 이번 투쟁이 의식과 조직이라는 성과를 남겼는가 하는 물음으로 우리를 이끈다. 의식과 조직은 노동자 투쟁을 평가할 때 요구 성취 여부 외의 다른 중요한 기준, 어쩌면 더 중요한 기준이다.

이 문제에서도 답변은 부정적이지 않을 수 없다. 파업 중단은 경찰 진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사대의 위협에 기가 질려 제풀에 꺾인 결과처럼 보인다. 이는 노동자들(파업 참가자든 아니든)의 자신감과 사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듯하다.

조직상의 성과로 말하자면, 비정규직지회 상근간부들은 비정규직지회의 독자성을 인정받고, 전에 정규직 노조로 직가입했던 5백여 명을 반환받기로 한 것을 내세울지 모른다. 하지만 자의에 따라 이적한

사람들을 ‘반환’받는다는 것도 우습지만, 비정규직지회의 ‘독자성’을 ‘성과’로 보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독자성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정규직 노조와 통합한 효과는 그만큼 감소되는 법이다.

조직 통합과 단결의 효과

비정규직지회가 노조 안에서 독자적 조직(지회나 분회나는 중요하지 않다)으로 남는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단결의 효과는 반감한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의 문제들을 비정규직지회가 알아서 처리할 문제들로 치부할 것이다. ‘너희 일은 너희 지회가 알아서 해’ 하는 답변이 돌아오기 십상일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조 지도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정규직 노조의 개량주의적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편한 일인가.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들을 정규직 지회가 알아서 처리할 문제들로 치부할 것이다. 노동조합 본래의 부문주의는 극복되기는커녕 더 강화되는 것이다.

대체로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활동가들은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가 조직 통합을 하면 정규직 노조 지도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단속할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이는 정규직 노조원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은 데서 비롯한 것이다.

무릇 노동조합이란 사용자의 착취를 완화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단결을 구현하는가 하면 전투적 조합원들을 단속하는 구실을 하기도 한다. 구체적 상황에서 이 두 가지 서로 모순된 측면 가운데 어느 측면이 더 우세한가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독자적 조직이 정당화되거나 그렇지 못할 것이다. 대체로 말해,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멀리하고 배척하는 경우에는 정당화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화될 수 없다. 오히려 기아차의 경우는 후자였다.

기아차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노조와 통합하겠다고 발표했었고, 이에 대해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80퍼센트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그런데도 비정규직지회 간부들은 통합 실행을 꺼렸다.(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에 맞서 정규직 노조 지도부가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직가입시키기라는 방식을 채택한 것은 비정규직지회의 감정을 악화시켜 노동자의 단결을 가로막는 것이었다.

엘리트 의식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정규직지회 활동가들이 정규직 노조로 이적하는 노동자들을 “맨날 파업하는 게 싫어 옮기는 자들”로 매도하고 비방한 것도 노동자의 단결을 해치는 처사였다. 그래 높은 그들을 ‘반환’받는 것을 성과로 치켜세우는 것도 모순이지만, 비정규직지회 활동가들이 보아 남긴 점은 “맨날 파업하는 게 싫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노조원이길 택하는 사람은 효과를 내는 파업을 원하고, 파업에 참가해도 보호받기를 원하는 사람일 것이라는 점이었다. 실제로, 그들 이적자들은 이번 비이적자 동료들의 파업에 대체로 동정적이었다.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비정규직 활동가들 다수의 도덕주의적 태도와 이질감으로 말미암아 이번 점거 파업은 이미 전투적인 활동가와 조합원의 전투성을 보여 준 것을 넘어 훨씬 더 광범한 노동자들의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파업 중에 정규직 노조 지도부가 소속 조합원들을 퇴근시켜, 조업 중단이 ‘사고’로 처리되고 정규직 조합원들의 임금 손실이 발생해, 이들의 여론이 악화하기 시작할 때도 비정규직 활동가들은 정규직 노조 지도부 탓만 했지, 정규직 조합원 다수의 정서를 헤아려 보려 애쓰지는 않았다.

물론 정규직 조합원들을 불신하는 비정규직 활동가들도 금속힘 등에 속한 정규직 활동가들은 ‘예외’로 볼 것이다. 한편, 비정규직 동료들에 대한 금속힘 등 정규직 활동가들의 태도에도 긍정적 의적 요소가 적잖은 부분 있었던 걸로 보이는 대목이 있다. 전술상의 주요한 결정은 점거 농성자들이 직접 또는 대표자를 뽑아 토론을 통해 할 수 있었고 또 그래야 했는데도 대부분 정규직·비정규직 활동가들 차원에서 이뤄졌다.(농성자들은 몇백 명밖에 안 돼, 총회 형식으로 직접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대리주의적 방식은 활동가들의 엘리트 의식을 반영하는 듯하다. 하지만 투쟁하는 노동자 대중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그렇기에 노동계급의 자기 해방이 가능한 것 아니겠는가. 엘리트 의식은 때때로 종파적 태도로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좌파’를 자처하는 활동가들은 자주파나 국민파에 속하는 정규직



특히 경제 위기와 신자유주의적 공세의 시기에 투쟁은 노동조합 운동가에게도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노조 지도부에 대해 그저 비난조로만 대하는 경우가 적잖이 있다. 하지만 그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은 그들을 직접 선출한 정규직 현장조합원들의 다수를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점에서 〈맞불〉의 관련 기사도, 필자 자신도 그런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했음을 고백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 사회 변혁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종파주의나 심지어 초좌파주의로 미끄러질 위험성이 언제나 있다. 때로 외부 세계가 자신에게 너무 엄혹하게 느껴지곤 하기 때문이다. 이런 유혹이 들 때면 언제나 우리는 대중이 정치적 경험을 통해 스스로 각성하고 스스로 조직할 잠재력이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전략과 전술

또한 정치 전략과 전술을 연마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공동전선이 중요한데, 흔히 좌파들은 공동전선을 좌파만의 결집체로 이해하기 쉽다. 이번 연좌파업 투쟁에서 이것은 정규직 노조에 대한 태도뿐 아니라 8월 31일의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문제에서도 드러났다.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는 그 명칭에 걸맞지 않게 너무 소규모였다. 그런 거창한 집회를 좌파 단체 상근자들과 좌파적 학생들뿐 아니라 개량주의적 지도부하의 노동자들도 광범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계획하지 않고 금요일 이른 오후에 열기로, 그것도 화요일에야 비로소 결정했다는 사실은 기아차 활동가들이 공장 밖으로부터의 연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듯하다.

정치는 하나의 옵션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니다. 특히 경제 위기와 신자유주의적 공세의 시기에는 노동조합 운동가에게도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사용자측의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용감함과 의지력, 투지를 보여 주었다. 특히 그들의 대다수가 오륙십대 아주머니들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더 희망을 일깨운다.

하지만 정규직 노조 지도부가 미덥지 못하다는 이유로 정규직 동료들과 함께 같은 노조에서 일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이들에 대한 도덕주의적 의심과 불신, 위화감 등을 갖는 비전략적·비전술적 방식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간질을 통한 각개격파라는 사용자들의 전략·전술을 분쇄할 수 없음도 보여 주었다.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 데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파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파업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자체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킨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를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킨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돼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권력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킨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역안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파업의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감하여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대학 맑스주의 포럼

서부대학 통합 포럼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연사 : 정진희(다함께 운영위원)
일시 : 9월 18일(화) 오후 6시 30분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포스코관 153호
문의 : 010-6890-8796

북부대학 통합 포럼
세계경제는 불황에 빠지는가?
연사 : 이장규(경성대학교 경제학과 강사)
일시 : 9월 19일(수) 오후 6시 30분
장소 : 고려대학교
문의 : 016-9353-5619

건국대
생태계와 자본주의
일시 : 9월 13일(목) 오후 6시 30분
장소 : 상하관 317호
문의 : 011-1731-2177

강원대
자유언론화와 기후재앙
일시 : 9월 18일(화) 오후 6시 30분
장소 : 인문대 3호관 122호
문의 : 010-9292-5963

시립대
‘테러와의 전쟁’과 미국 제국주의의 위기
일시 : 9월 20일(목) 오후 6시 30분
문의 : 011-9347-1075

지역 사회포럼

서울 남부
세계경제는 불황에 빠지는가?
연사 : 이장규(경성대학교 경제학과 강사)
일시 : 9월 12일(수) 오후 8시
장소 : 방배1동 사무소(방배역 3번 출구)
참가비 : 1천 원 / 문의 : 010-2401-1987

서울 중부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연사 : 한규현(맞불) 기자
일시 : 9월 14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 안국실천시민연대 교육센터 (동소문 우체국 건물 5층 / 한성대입구역 7번 출구)
참가비 : 2천 원 / 문의 : 019-647-3309

서울 동부
우리는 왜 이주노동자들을 환영해야 하는가?
연사 : 마숨(이주노동자 사무국장, 황밀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이정원(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집행위원)
일시 : 9월 13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여성능력개발원구 동부여성플라자 3층 회의실(건대역 6번 출구)
참가비 : 2천 원 / 문의 : 019-9731-7299

서울 서부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연사 : 한규현(맞불) 기자
일시 : 9월 28일(금) 오후 7시 45분
장소 : 세미나 공간 ‘새움넷’(신촌역 1번 출구)
문의 : 017-267-0400

주간 〈맞불〉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 6개월 / 2만 5천 원 (신문값 2만 원 + 우송료 5천 원)
□ 1년 / 5만 원 (신문값 4만 원 + 우송료 1만 원)

www.counterforr.kr / reader@counterforr.kr / 전화 : 02-2271-2395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예금주 : 백은진)

‘다함께’에 가입 하십시오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시 하겠습니까? □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하십시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예금주 : 백은진)

뉴코아 · 이랜드 투쟁의 ‘추석 격돌’

강력한 연대와 매출 타격 투쟁이 필요하다

전지윤

뉴코아 · 이랜드 투쟁은 이미 단위 사업장을 넘어서 비정규직 악법의 운명과 연결돼 버렸다. 무려 1천억 원의 커다란 매출 손실을 입었다는 이랜드 사측이 쉽사리 양보하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비정규직 확대 기조를 유지하려는 기업주들도 이랜드 사측에게 양보하지 말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교섭 자리에서 뉴코아 사장 최종양은 “경총이 반대한다”며 외주화 철회를 거부했다고 한다. 기업주들은 뉴코아 · 이랜드 투쟁이 요구한 쟁취라는 최종적 승리를 거뒀을 때 그것이 가져 올 ‘도미노 효과’를 겁내고 있다.

뉴코아 · 이랜드 투쟁은 이제 유통업계 1년 매출의 30퍼센트를 차지한다는 ‘추석 격돌’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것이 이후 투쟁의 향방을 가를 듯하다.

민주노총과 뉴코아 · 이랜드 노동자들은 2주간 집중 매출 타격 투쟁을 잡아 놓고 전투를 준비하고 있다. 이것이 제대로 성사된다면 박성수에게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랜드 사측은 이를 저지하려고 극단적 폭력 탄압에 매달리고 있다. 경찰과 구사대의 추악한 ‘살인적’ 폭력은 9월 9일 강남점 매출 타격 투쟁 때 절정에 달했다. 수적으로 우세를 차지한 구사대는 흥기까지 휘두르며 노동자들과 연대 단체 동지들을 하나씩 끌어내 욕설을 퍼부었고 집단 린치를 가했다.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고 정신적 충격까지 받았다. 경찰은 이런 상황을 수수방관하며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물대포를 쏘기도 했다.

이랜드 사측은 점주들을 사주해 민주노

총과 민주노동당 등에 1백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다함께’도 명예 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한편, 이랜드 사측은 노동부 중재 교섭에서 뉴코아 노조에게 일부 양보안을 제시했다. 이것은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3개월 가까이 계속돼 온 뉴코아 · 이랜드 노동자들의 영웅적인 투쟁과 수많은 사람들이 연대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이 양보안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여전히 못 미치는 내용이다. 더구나 ‘추석 격돌’을 김빠기하려는 의도도 섞여 있는 듯하다. 뉴코아 노조와 이랜드 노조의 분리교섭을 요구하며 뉴코아 노조에만 보잘것 없는 양보안을 낸 것이다.

린치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저들의 폭력 탄압에 강력하게 맞서며 흔들림없이 ‘추석 격돌’을 건설 · 강행하는 것이다.

‘1천 명 선봉대’와 투쟁 기금 모금으로 뉴코아 · 이랜드 노동자들에게 큰 힘을 준 바 있는 민주노총 지도부는 계속 굳건한 연대를 건설해야 한다. 이번 주말처럼 투쟁 계획을 갑자기 축소하거나, 축소된 계획마저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민주노총 이석형 위원장은 얼마전 6개월간의 ‘현장대장정’을 마치는 기자회견에서 반갑게도 “내년 초에 국가 기반을 뒤흔드는 제대로 된 총파업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투쟁을 건설해야 하고, 무엇보다 뉴코아 · 이랜드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

뉴코아 · 이랜드 노동자들이 악랄한 경



찰 · 구사대 폭력에 시달리는 지금 ‘1천 명 선봉대’도 다시 가동할 필요가 있다. 현장 조합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호소와 조직을 통해 이번 주말에는 1만 명을 상경시켜 주요 매장을 모두 봉쇄한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금은 오직 ‘추석 격돌’ 건설이라는 한 길만을 바라보며 전진할 때다. 이런 투쟁의 힘이 뒷받침될 때만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

따라서 ‘뉴코아와 이랜드를 분리해서 교섭하자’거나 ‘노조도 양보해야 교섭이 가능하다’, ‘일단 투쟁을 중단하고 집중 교섭을 하자’는 저들의 제안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강력한 투쟁으로 뒷받침되는 교섭만이 우리의 요구를 쟁취할 수 있다. 저들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공동 교섭 · 타격’ 원칙도 빈틈없이 유지돼야 한다.

이 투쟁의 승리는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기폭제이자 시금석”(이남신 이랜드일반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될 것이다.

힘난한 파도를 헤치며 앞장서 투쟁해 온 뉴코아 · 이랜드 노동자들의 뒤를 따라 주요 산별 · 대형 노조의 조직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이 강력한 연대 투쟁에 나서야만 한다.

‘추석 매출 제로’ 투쟁

일시: 9월 15일(토)~16일(일)

장소: 뉴코아 · 이랜드 수도권 주요 매장

역겨운 이중잣대,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10월 2일 노무현은 북한으로 잠입 · 탈출(국가보안법 제6조 위반)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수괴인 김정일과 회합 · 통신(국가보안법 제8조 위반)하고 덕담을 나누며 찬양 · 고무(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할 것이다. 또한, 경제협력(국가보안법 제5조 ‘자진지원 · 금품수수’, 국가보안법 제9조 ‘편의제공’ 위반)을 약속하고 돌아올 것이다.

물론 노무현은 절대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반면 ‘일심회’ 구속자들은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혀 있다. 한총련 활동가들 등 다른 국가보안법 구속자들도 마찬가지다.

우익들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국가보안

법 폐지’ 같은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의제는 논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난리지만 국가보안법은 위와 같은 이중잣대로 사람들의 사상과 행위를 처벌하고 억압해 온 악법 중 악법이다.

이런 점 때문에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9월 3일 국회앞 기자회견에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평화체제와 양립할 수 없는 냉전 악법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얼마전 개최한 “평화체제와 국가보안법” 토론회에서 한상희 교수는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국가보안법은 존립 근거가 사라지므로 자연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과 함께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되리라는 기대가 헛된 것임을 우리는 지난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7년간의 경험을 통해 배웠다. 김대중은 1차 정상회담 이후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해마다 평균 1백20명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했다.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다. 남북 정상회담을 발표한 후 8.15 사면에서 양심수들을 제외했을 뿐 아니라 ‘일심회’ 구속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이 토론회에서 김은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도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의 친미 지배 집단의 가장 강력한 통치 수단이기 때문에 설령 평화체제가 구축된다 하더라도 결코 만만하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오로지 강력한 대중 투쟁으로만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진영은 남북 정상회담이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할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하기보다, 남북 정상회담이 자아낼 이데올로기적 모순을 이용해 국가보안법의 이중잣대를 폭로하며 강력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 한다면서 국가보안법 웬말이냐, 국가보안법 폐지하라”고 외치면서 말이다.

조승희

2차 정상회담에 즈음한

“반평화 · 반통일 ·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대회”

일시: 9월 15일(토) 오후 4시

장소: 서울역



린지 저먼은

영국 '전쟁저지연합' 사무총장이며

영국 '리스펙트' 런던시장 후보이다

다 시 듣는 맑시즘 2007 ②

사랑, 결혼, 그리고 가족

[편집자] 맑시즘 2007에서 존 리즈와 린지 저먼이 한 연설들을 4주에 1번씩, 네 차례에 걸쳐 싣고 있다.

이 글은 그 두 번째 순서로 린지 저먼이 연설한 '사랑, 결혼, 그리고 가족'을 녹취한 것이다.

- ① 사회 변혁의 전략과 전술(존 리즈)
- ② **사랑, 결혼, 그리고 가족(린지 저먼)**
- ③ 현대 제국주의의 정치와 경제(존 리즈)
- ④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린지 저먼)

혹시라도 사랑, 결혼, 그리고 가족 문제에 관한 개인적인 조언을 구하러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강연이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제 강연의 목적은 사회주의자들이 왜 사랑, 결혼, 가족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며, 우리 모두에게 그 주제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에 관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선 매우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인류의 절반인 여성이 차별과 불평등에 내맡겨진 채로 사회주의를 달성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성 해방을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불가결한 일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역사상 모든 위대한 사회 운동은 평등을 추구하는 여성 운동, 자유연애를 지향하거나 사랑과 성관계에 관한 새로운 관념들을 실험하는 운동을 그 속에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혁명을 비롯한 모든 위대한 혁명에서 이러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를 성취하는 데서 다른 어떤 혁명보다 멀리 나아간 1917년 러시아 혁명의 경우 특히 더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그보다 더 전에, 1880년대에도 칼 맑스의 절친한 친구이자 동지였던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자유연애가 모든 위대한 사회운동의 일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지 우리는 자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혁명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바빠진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들이 자유연애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시간이 남아 돌아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이유는 대격변기에 사람들의 생각이 더 개방적으로 바뀌고, 삶과 연애에 관한 태도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배적 이데올로기

평등을 위한 여성들의 투쟁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 용어를 역시 이 점을 보여 줍니다. 19세기에 사용된 여성 해방



일과 가정 - 여성 이중의 굴레

(emancipation)이라는 용어는 자유를 얻기 위해 싸우는 카리브해 연안 지역과 아메리카 노예들의 해방(emancipation) 운동에서 단어를 차용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등장한 여성 해방(liberation) 운동 역시 당시에 아프리카와, 더 중요하게는 베트남에서 일고 있던 반식민지 민족 해방(liberation) 투쟁에서 단어를 차용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관념들은 어느 시대나 지배적 이데올로기에는 위협적이었지만, 한편 여성들에게는 다른 경로로는 접할 수 없는 대안적 사상들을 제시해 주는 통로였습니다.

물론 여태껏 수백 년 동안 우세했고 지금도 우세한 관념은, 여성은 자신이 겪는 불평등과 억압에 맞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지위가 열등한 것은 자연의 순리라는 것이지요.

[이런 관념이 우세할 수 있는 것은] 오랫동안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족 내에서 생활해 왔기 때문입니다. 비록 각각의 사회마다 가족의 형태는 달랐지만, 여성이 가족에서 떨어져 나와 가족 밖에서 살아가는 것은 종종 법률에 위배됐고, 대부분의 종교와 대다수 사회의 관습과 전통도 이를 금지했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 대부분에 걸쳐 인간은 남녀노소 공히 어떠한 형태이든 가족에 소속돼 살아왔습니다. 비록 그들이 속한 사회의 성격, 즉 사회 구성원들이 부를 생산하는 방식에 따라 가족의 형태도 천차만별이었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는 가족의 존재와 여성의 불평등을 영원 불변한 것으로 묘사합니다. <고인돌 가족>이라는 미국 만화를 보신 분이라면 제 말 뜻을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다시 듣는 맑시즘 2007 ②

〈고인돌 가족〉에는 1950년대 미국 가정을 쏙 빼닮은 석기시대 가족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석기시대 불랑장에서 여가를 보내고, 석기시대 진공 청소기로 집을 청소하며, 아이들의 어머니는 1950년대의 어머니와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들을 돌봅니다. 모든 것이 1950년대 미국 가정의 모습을 빼다 박은 듯합니다.

이러한 설정은 남녀의 역할 분담이 언제나 지금과 같았으며 앞으로 변하지 않을 것임을, 즉 여성은 언제나 가정과 아이들을 돌보는 존재로, 남성은 석기시대의 차를 몰고 직장에 나가는(실제의 석기시대라면 여성들이 집에 있는 동안 사냥을 나가는) 존재로 남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두 말할 것도 없이 당시의 실제 생활 양식과 가족 형태는 오늘날과 많이 달랐습니다.

사실 자본주의는 가족이 조직되는 방식에 일대 변혁을 가져왔고, 그 결과로 나타난 자본주의 가족은 과거의 어떤 가족과도 모습이 다릅니다.

유사 이래 대부분의 기간 동안 가족은 농경이 이뤄지는 토지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가족 구성원들이 직장에 나가거나 등교하거나 영화 보러 가느라 잦은 이동을 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당시의 가족 구성원들은 집을 둘러싼 좁은 토지 내에서 거의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따라서 각종 음식과 의복을 비롯한 많은 재화가 가내(家内)에서 생산됐고 일부는 다른 가족의 생산물과 교환했습니다.

자본주의는 이 모든 것을 근본부터 바꿔 놓았습니다. 가내와 토지에서 생산되던 재화는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상품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은 농지를 떠나 도시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자본주의는 또한 각각의 가족 구성원을 독자적 임금 노동자로 만들었습니다. 자본주의 초기의 영국에서는 가족 중 가장 어린 아이도 임금노동에 투입됐습니다. 네다섯 살의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공장이나 탄광에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더는 이런 일이 없지만 그럼에도 가족의 모든 구성원은 언젠가는 노동 시장에 나가 자본가 계급에게 노동력을 팔도록 기대됩니다.

이것은 가족 내의 관계뿐 아니라 가족이 바깥 세상과 맺는 관계도 변화시킵니다. 특히 이는 가부장인 남성의 지배에 기초한 전(前)자본주의적 가족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이는 새로운 관념을 낳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여성들은 자신이 더는 남성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상 처음으로 그들에게 독자적인 수입이 생기면서 예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됩니다.

또한 자본주의는 “개인”이라는 관념을 처음으로 탄생시킵니다. 독자적인 의식과 개성을 지닌 개인이라는 관념을 낳고, 특히 개인 간의 낭만적 사랑,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통한 개인의 자아실현이라는 관념을 낳았습니다. 이 모든 사상은 17세기와 18세기 자본주의 사상의 태동기에 나타났습니다.

성평등

19세기 유럽 문화를 보면 여성 작가가 여성의 연애편과 로맨스에 관해 쓴 소설이나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이 놀라울 정도로 많습니다. 후자에 해당하는 소설을 쓴 작가에는 플로베르 등 19세기 소설가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은 여성 해방과 성평등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여성 해방은 아직 요원합니다. 영국과 한국을 포함해 대다수의 선진국에서 지난 수십 년 간 여성의 삶에 전례 없는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여성의 삶에 일어난 첫 번째 커다란 변화는 가외(家外) 노동의 증대였습니다. 물론 여성은 그 전에 대개 계속 농동을 해왔지만 대개 부활(不拂) 노동이었고 인정도 받지 못했을 뿐더러, 설령 탁아소 같은 곳에서 유급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여성들이 있었다 해도 똑같은 일을 무급으로 하는 여성 노동력이 워낙



여성 노동자들의 놀라운 잠재력을 보여 준 뉴코아·이랜드 투쟁

광범한 탓에 최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도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면서] 크게 변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도 인정했듯이 지난 20~30년 간 여성 노동이 세계 부의 창조에 기여한 몫이 신기술 기여분보다 크고 양대 신흥공업국인 중국과 인도의 기여분보다도 컸기 때문입니다(물론 그렇다 해도 여성의 ‘경제 기적’을 칭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욱이, 노동은 여성의 자의식과 남성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여성들은 아이를 더 적게 갖거나 아예 갖지 않습니다. 결혼하는 여성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이혼율은 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독자적인 수입을 갖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대하는 여성의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여성들의 교육 수준 또한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는데, 이는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 단지 어머니나 주부가 되는 것 이외의 더 많은 가능성에 눈뜨게 했을 뿐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독립된 삶의 기회를 부여했고, 따라서 예전처럼 씨족 촌락이나 가족 내에 머물렀더라면 못지 못했을 여러 사회제 관계를 맺게 해 주었습니다.

이는 세 번째 그림, 즉 피임이 용이해지고 낙태 시술이 광범하게 보급된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가 계신 젊은 분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현재 세대의 여

성들은 자신의 몸을 안전하게 통제하고 자신이 아이를 가질지 여부와 언제, 몇 명이나 가질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된 역사상 최초의 세대입니다. 1930년대에 광부 부인들의 유산 사례를 연구한 어느 보고서는 조사한 유산 사례의 최대 절반 가량이 사실은 부인들 스스로 행한 낙태였다고 추정했습니다. 오늘날에는 합법적인 낙태를 시술 받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명백하게도 낙태에 대한 요구는 항상 있었고, 적어도 오늘날 상당수 국가에서는 낙태 시술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제공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선택권

이것이 중요한 진일보인 이유는, 아이를 원하고 또 낳을 수 있는 여성들이 1백 년 전이라면 8~10명씩 낳았을 것을 이제는 한두 명만 낳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남자와 맺어진 여성이라도 자신이 그 남자를 더는 사랑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을 때는 원래의 남자를 떠날 수 있게 됐고, 당연히 남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성의 신체가 더 이상 여성의 운명을 구속하지 않으며, 여성이 이제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영위할지, 아이를

가질지, 가진다면 누가 아이들을 돌볼지, 모유 수유를 할지 여부 등 온갖 문제에 관해 선택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많은 우파들이 이 점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우익 정치는 많은 부분 가족 수호나 가족 강화라는 사상과 결부돼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건대, 여성들은 선택권이 주어지는 한 언제나 이와 같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렇기에 지난 20~30년 간 전세계 수준에서 나타난 일관된 패턴은 결혼 건수 감소·이혼 건수 증대·출산을 저하였습니다.

영국의 통계치를 보면, 10건의 출산 중 평균 4건이 혼외 출산이었고, 18~60세 사이의 여성 중 20퍼센트가 혼외 대신 동거 생활을 하고 있으며, 24퍼센트의 아동이 한 부모 가정(보통 어머니 쪽)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수십 년 사이에 가족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구조물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심각하게 약화했습니다.

그러한 사실로부터 전통적 가족이 완전히 붕괴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쉬운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맞은 말입니다. 실제로 지난 수십 년 사이에 가족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구조물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심각하게 약화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가족을 복원하려는 쪽으로 온갖 사회적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지 우익 이데올로그들만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국가 자체가 가족에 개입해 아이들이 제대로 양육되고 교육을 받게끔 강제합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아이들의 양육과 관련한 가지각색의 법령이 존재하며 가족의 중요성이 이데올로기적으로 매우 강조됩니다. 한국에는 1자녀 이상 갖기

를 장려하는 광고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인구 수 증대뿐 아니라 전통적 가족 형태 유지를 위한 명백한 이데올로기적 시도입니다.

또한 비록 결혼 건수가 줄고 있어도 결혼식 자체는 더욱 규모와 비용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영국에서는 화이트 웨딩[결혼식 전체에 하얀색 장식을 사용하는 값비싼 결혼식-옮긴이]이 점점

더 인기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려면 가족의 양면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가족은 자본가 계급에게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칼 맑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가족은 노동력 재생산의 도구입니다.

이 말의 의미인즉, 가족이 있기에 현존 세대의 노동자들의 의식주가 해결되고 다양한 욕구가 만족됨으로써 사회가 비교적 보수적이고 안정된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다음 세대의 노동자들, 즉 아동들이 부모들에게는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미래에 그들의 노동력으로부터 혜택을 볼 국가에게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방식으로 사회화되고 양육되며 일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양면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가족의 이와 같은 측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입장하는 신부 가운데 누구도 노동력 재생산을 염두에 두고 예식을 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그들이 결혼을 하는 이유는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결혼식이 자기 생애 최고의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그리고 결혼 뒤의 고달픈 인생을 생각하면 아마 실제로 생애 최고의 날일 것입니다[웃음]). 혹은 아이를 원해서, 가정을 원해서, 다시 말해 사회가 그들에게 가지 있다고 말하는 일체의 것

을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가족의 다양한 기능들을 보여 줍니다. 한편으로 가족은 자본가 계급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 노동계급에게는 비정한 세상의 ‘천국’입니다. 노동자나 고아 등 가족의 울타리 밖에 서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삽니다.

그래서 가족은 계속 유지되지만 가족 구성원들은 가족의 원자화, 가족 내부의 압력, 가정 폭력과 성적 괴롭힘 등 때문에 큰 대가를 치릅니다. 또, 가족 제도가 여성 차별의 원인이기 때문에 특히 여성이 끔찍한 희생을 치릅니다.

여성의 필요는 이윤을 창출하려는 자본가들의 필요에 종속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무상 보육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35시간 노동제가 도입되지 않고, 여성들이 어머니나 할머니 세대들이 과거에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장시간 고대 근무를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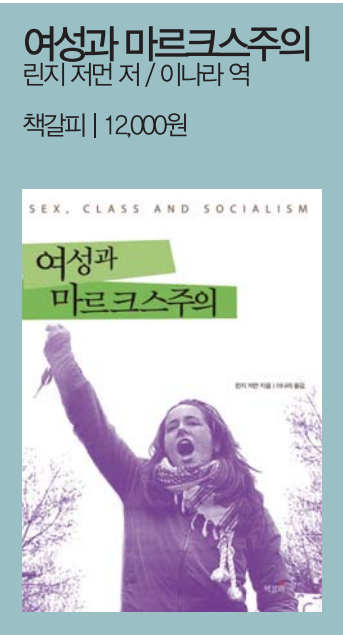
지난 30년 간 볼 수 있었던 해방의 가능성들, 1980년대와 70년대 여성 운동의 요구와 희망 들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여성 해방이 계급 사회라는 벽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여성 해방 운동은 여성이 일할 권리를 요구했고, 그것은 여성이 집에 속박돼야 한다고 강요하는 사회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일할 권리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신자유주의 세계에서 남성과 동등한 자격으로 착취당할 권리였고, 여성은 노동 외에도 가사와 양육의 이중 굴레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여성 해방 운동의 또 다른 요구는 성의 개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적 자유는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상품으로 변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포르노 산업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늘날 여성의 자아상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부정적 측면이 많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모습이 되기 위해 다이어트에 집착하고, 이 때문에 식사장애로 고통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여성을 가정에서 벗어나게 했지만 차별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가 이윤이 아니라 세상의 부를 생산하는 사람의 필요를 위해 조직돼야 합니다. 따라서 계급사회의 종식과 계급사회가 초래한 분열과 차별의 종식만이 여성 해방과 인류 전체의 해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2004년 4월 워싱턴 낙태권 옹호 시위

» 정리 발언

먼저 동성 결혼에 대해 답하겠습니다. 저는 플로어에서 답변하신 분의 의견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저는 결혼하지 않았고 누군가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다른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려는 사람들의 권리도 옹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게이·레즈비언 결혼의 경우처럼 다른 사람들이 반동적 이유에서 그 결혼에 반대한다면 말이죠.

영국에는 “시민 동반자”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온전한 결혼과는 다르지만 결혼과 상당히 유사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민 동반자 관계를 서로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결혼이 해방적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당신이 동성애자이건 이성애자이건 결혼과 일부일처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동성 결혼을 옹호하지만 대안적 성을 원한다면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들의 가장 인습적인 측면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낙태 문제에 대해 답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낙태에 반대합니다. 가톨릭 등 종교적 이유에서 낙태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지만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수가 낙태에 반대합니다. 저는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잘 알지만 세 가지 이유에서 그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낙태

먼저, 거의 모든 여성들이 스스로 원치 않는 임신을 했거나, 그런 경험을 한 여성들을 주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 심지어 [유산유도하기 위해] 자해까지 하는 끔찍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는 최소한 그들이 합법적으로 낙태 시술을 받을 권리를 옹호해야 합니다. 낙태 문제는 언제나 “불법적이고 위험한 낙태 시술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합법적이고 안전한 시술을 받을 것인가?”의 문제로 좁혀집니다. 저는 여성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낙태 때문에 육체적으로, 혹은 금전적으로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낙태는 대부분 임신 초기에 행해집니다. 따라서 태아가 독립된 인간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낙태는 대부분 임신 12주 안에 행해지는데, 영국 관습법은 전통적으로 이 시기에 아직 영혼이 태아에 깃들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낙태를 합법으로 여깁니다.

어쨌든, 임신 12주 후에 낙태를 행하는 드문 경우에도 산모의 행복·건강과 태어나지 않은 아이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산모를 택하겠습니다.

셋째로, 낙태 반대는 이데올로기적 통제 수단이기도 합니다. 우파들이 낙태권을 공격하는 이유는 그들이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지적했듯이 그들은 전쟁광이고, 빈민의 고통에 상관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파들은 여성이 집에 속박되기를, 여성이 남편이나 아버지 등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1918년 러시아의 동성애 옹호 포스터 - 러시아 혁명 이후에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동성애 결혼이 허용됐다

속박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파들이 이 문제를 그토록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가 여성 차별을 설명하는데 부적합한 도구라는 어떤 동지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그 동지는 사회주의자들이 여성 차별 문제를 자본주의로 환원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지 자본주의 아래 여성 차별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성 차별이 계급사회 등장 이래 수천 년 간 존재했기 때문에 계급사회를 종식시켜야만 여성 차별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는 또한 그 동지가 여성 차별 문제에 대한 좌파의 기여를 과소평가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좌파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훌륭한 기여를 했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쟁취하는 데 필요한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포기한 페미니스트들보다 좌파가 [여성 차별 문제 해결에] 더 많이 기여했습니다.

사실, 맑스와 엥겔스는 1840년대 초에 《공산주의자 선언》 등에서 이미 여성 차별, 가족이 처한 상황 등에 대해 언급했

고, 전 생애 동안 여성 평등 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 동지가 여성 문제에서 공산당을 비판한 데 동의합니다. 공산당들은 오래전에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포기했고 여성 해방에 별로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산당들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지 않았고, 여성을 해방시키지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대안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이 남았는데요, 먼저 가족의 대안이 무엇이나는 매우 훌륭한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자본주의의 조직 방식과 밀접히 연관돼 있습니다. 합리적 사회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은 주택이나 아파트에 살면서도 세탁기와 조리기와 자동차를 각자 소유해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갖춰야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주입받습니다. 또한 한 두 명의 부모가 아동의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동과 부모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회 전체가 아동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저는 이런 원칙 속에서 새로운 가족 형태가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안적 연애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런 종류의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웃음]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개인적 삶과 정치적 삶, 혹은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 사이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성매매 문제에 대해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어떤 여성이나 남성이 자기 몸을 팔아야 생계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매매가 화려하거나 세련된 행위라는 관념이 존재하

는 것은 이 자본주의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나를 보여 줍니다.

둘째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남성, 혹은 더 흔하게 여성이 남편과 부인의 소유물로 여겨지는 관계는 평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타락한 관계입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의 개인적 태도가 자본주의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예컨대 질투심을 봅시다. 사람들이 사회를 경쟁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동반자와의 관계를] 일대일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질투심을 느낍니다. 동반자와의 관계를 폭넓은 인간관계 속에서 봐야 하며 미래의 이상적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그럴 것입니다.

엥겔스는 사회주의에서 동반자와의 관계가 “연속적 일부일처제”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즉, 사람들이 일부일처 관계를 맺고, 그것이 끝나면 다른 사람과 일부일처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 그런 관계를 연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맑스주의자 알렉산드라 콜론파이는 또 다른 의견을 주장했습니다. 콜론파이는 모두가 자유연애를 할 것이라 생각했고, 이에 대해 여러 가지 흥미롭고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의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 중 누구도 그것에 대해 정확한 상을 그릴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제약에서 해방된 미래 세대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형태로 대안적 성, 대안적 가족, 대안적 생활양식을 만들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앞서 플로어에서 어떤 분이 자신을 성에 관심이 많은 20대로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20대의 특권이겠죠.[웃음] 그래서 사회운동에 청년들이 참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정치 활동 과정에서 성과 사랑의 문제를 제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녹취·번역 천경록



알렉산드라 콜론파이